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3호(통권 130호) 2022. 9. 119~154
DOI http://dx.doi.org/10.22783/krila.2022.36.3.119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청년특성과 청년정책 정합성 분석*

A Study on Consistency betwee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Youth Population and Youth Policy of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조 유 선**·금 유 선***·민 효 상****
Cho, Yusun·Keum, Yuseon·Min, Hyosang

목 차

Ⅰ. 서론
Ⅱ. 경기도 시군별 청년인구 특성과 민선 8기 청년정책 공약
Ⅲ. 연구설계 및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민선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청년정책 공약이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년인구를 소득·교육·노동지위에 따라 유형화 한 후, 유형별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인구는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 될 수 있으며, 유형별로 금융·자산, 주거, 일자리, 건강과 관련된 생활실태와 관련 정책수요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성남시·수원시·용인시는 성취형, 이천시와 포천시는 정착형, 김포시·양평군·연천군·의정부시는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단체장들의 청년정책 공약은 지

* 본 연구는 2022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경기도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현황 및 정책수요 차이분석]을 수정 및 재구성한 것임
** 제1저자,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수석연구원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2. 8. 11. 심사기간: 2022. 8. 11. ~ 2022. 9. 19. 게재확정일: 2022. 9. 19.

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인구 특성을 반영한 공약의 구체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청년정책, 청년인구, 정책수요, 지방선거, 선거공약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local election pledges in youth policy of the 8th municipal government in 31 cities and counties of Gyeonggi-do were establish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population in the region. By using「Employment Survey by Regions」and the「Gyeonggi Province Youth Household Survey」, we categorized Korean youth population based on the income, education, and labor market status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living conditions and policy demands by type. We found that youth popul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achievement type, settlement type, and marginalized type, and they were different in living conditions and policy demands related to finance, assets, housing, jobs, and health. However, it turned out that local election pledges in youth policy did not reflect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youth population in the region, so it is required to materialize the election promis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population.

□ Keywords: Youth Policy, Youth Population, Policy Demand, Local Election, Local Election Pledge

Ⅰ. 서론

청년은 생애단계의 특성상 처음으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기를 경험하는 단계로(정준영, 2016), 이전 생애시기와는 달리 고용, 생활,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삶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이승윤 외, 2017). 특히 현재 한국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소외현상과 함께 소득과 주거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오랜 시간동안 기존의 복지체계 내에서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하지만, 점차 청년층이 겪는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합의가 형성되면서 청년층의 고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대선부터 2030 청년층의 투표율이 증가하고 이들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로 평가됨에 따라 청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청년정책 공약이 선거의 주요 핵심 전략으로 고려되었고(진형익, 2022; 최혜민·송진미, 2022), 올해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주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로 논의되었다. 그렇다면, 각종 선거에서 제시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공약들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특성과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마다 인구구조, 산업, 생활환경 등의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자치단체장들의 청년정책 공약이 이 같은 지역과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청년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청년 인구 내에 존재하는 이질성이다. 같은 청년집단이라 하더라도 소득, 교육, 노동 수준에 따라 자산, 생활지위, 삶의 질, 미래 지위 등이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청년층의 정책 및 복지수요에도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정기용 외, 2022; 채병주·황선재, 2021). 따라서, 청년집단을 보편적으로 포괄하면서도 집단 내 차이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정책설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정책대상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연구와 이질적 특성에 기반한 정책 수요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분권화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김병규 외, 2009), 지자체 수준에서 지역특성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가능해졌음에도 기초단체 수준의 청년정책의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최하예·황성수,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선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청년정책 공약이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경기도는 2021년

만20세에서 34세 청년인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청년인구의 약 26.9%인 247만명이 거주중이며[1],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31개의 기초지자체가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임진영 외, 2018),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청년정책의 차이점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 특성과 청년정책의 정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특성에 따른 생활 실태 및 정책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인데, 2021년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는 국내에서 실시된 청년의 금융·주거·고용·건강과 관련된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와 관련된 조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조사로 기존의 사회조사에서는 제한적이었던 시군단위로 청년인구의 복지수요를 비교분석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경기도를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도 청년가구는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경제인구로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민효상·이성욱, 2022b) 경기도 청년인구특성과 청년정책간의 정합성에 관한 분석은 타 지자체 청년정책 수립에도 중요 함의를 제시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먼저 우리나라 청년인구를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인 소득, 교육, 노동지위에 따라 유형화한 후, 청년인구의 유형별 금융·자산, 주거, 일자리, 건강과 관련된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청년인구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의 청년정책 공약이 지역 청년인구의 정책수요에 적합하게 제시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경기도 시군별 청년인구 특성과 민선 8기 청년정책 공약

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청년정책 공약 및 시군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2030으로 대표되는 청년인구는 전통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며 정치적 무관심이 높은 인구층으로 간주되었다(Quintelier, 2007; Wattenberg, 2015). 200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치러진 12개의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가상준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선거에서 2030 청년층의 투표율은 타 연령층보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대선부터는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다른 연령대의 투표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접속일: 2022.9.5.)

율이 모두 감소한 반면 2030세대의 투표율은 유일하게 증가하는 등 청년세대는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 세대로 변화하고 있다(가상준 외, 2020). 비교적 투표성향이 고정된 다른세대와 달리 청년은 선거의 성격과 정책에 따라 투표 참여에 유동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청년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이 중요해졌다(최혜민·송진미, 2022).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청년의 투표결정요인은 학력, 거주지역, 고용상태 등 인적 배경뿐만 아니라 정치효능감, SNS 등의 뉴미디어, 청소년기의 교육 경험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경아 외, 2018; 정병삼·박균열, 2021). 그중에서도 정치효능감과 관련하여 청년들은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특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실제로 정책이 이에 부응하는 정도를 다른 세대에 비해 특히 중요시 하였으며, 이런 성향은 지방정부에 대한 투표 태도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욱, 2020; 최혜민·송진미, 2022).

청년층의 표심에 정책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올해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청년정책은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지역 중 하나였던 경기도의 도지사 당선인의 청년관련 공약만 하더라도 청년기본소득 등 기존 정책들의 확대 및 강화뿐만 아니라 경기청년학교, 경기청년사다리, 경기청년은행, 경기 청년 갭이어 등 다수의 신규정책 도입이 포함되었다(민효상·이성욱, 2022a). 경기도지사 외에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청년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세부적인 공약의 내용 및 분류는 〈표 1〉과 같다[2].

〈표 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주요 청년정책 공약 정리

구분	영역별 공약사항
수원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경단자 채용 쿼터제), 시설 지원(청년창업 기업 육성)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지원(면접 풀 패키지 지원), 현금성 수당(교통비) [주거] 이용자 지원(주택공급)
용인시	[일자리와 소득] 시설 지원(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기관)
고양시	
성남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구인·구직 플랫폼, 4·5차 판교 밸리 확대), 시설 지원(청년창업 혁신단지), 현금성 수당(개발이익의 일정 부분 블록 체인화) [주거] 이용자 지원(반값 주택공급)
화성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일자리 공급, 청년 고용기업 지원), 시설 지원(청년취업 지원센터, 청년창업 보육지원센터), 현금성 수당(자기 계발비, 직업 전환 교육비, 창업비용 지원) [주거] 이용자 지원(청년 임대아파트), 현금성 수당(전세자금 융자 추가지원)

2) 당선인의 청년정책 공약은 공약집을 토대로 기초분석하였으며, 당선인들이 제공하는 공식블로그 등에서 세부 공약사항 등을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구분	영역별 공약사항
부천시	[일자리와 소득] 시설 지원(창업보육센터) [주거] 이용자 지원(주택공급)
남양주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일자리 연계), 현금성 수당(청년챙김통장)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시설 지원(청년창업센터) [주거] 이용자 지원(주거환경 개선)
안산시	[일자리와 소득] 시설 지원(청년창업공간)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지원(만남의 장 플랫폼 제공) [주거] 이용자 지원(주택공급-매입·임대), 현금성 수당(대출이자 지원)
평택시	[일자리와 소득] 현금성 수당(청년 창업자 금융지원)
안양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일자리 플랫폼, 부실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지원(청년 커뮤니티) [주거] 이용자 지원(주택공급), 현금성 수당(이사 비용)
시흥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시설 지원(청년창업센터) [주거] 이용자 지원(주택공급)
김포시	
파주시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지원(청년 정책 전문·자문그룹, 명예부시장제), 현금성 수당(청년 기본시리즈)
의정부시	[일자리와 소득] 시설 지원(청년창업캠퍼스)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지원(청년 1인 가구 지원), 시설 지원(청년복합문화 공간)
광주시	[일자리와 소득] 시설 지원(청년창업 허브센터)
광명시	[일자리와 소득] 시설 지원(소상공인 청년지원단)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지원(청년 간병인 지원 대책 수립), 시설 지원(문화 커뮤니티 시설), 현금성 수당(전역 축하금) [주거] 이용자 지원(주택공급), 현금성 수당(전세보증금 보험료, 전·월세 이자 지원)
하남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청년 채용기업 인센티브), 시설 지원(청년일자리과), 현금성 수당(취업 교육비) [주거] 현금성 수당(전세대출이자)
군포시	[주거] 이용자 지원(반값 주택공급)
오산시	[일자리와 소득] 시설 지원(창업 및 취업 지원센터), 현금성 수당(취업준비금)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지원(청년시정발전위원회, 청년 문화의 거리), 시설 지원(청년 경제문화국 조직) [주거] 이용자 지원(주택공급)
양주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 이용자 지원(주택공급)
이천시	[일자리와 소득] 현금성 수당(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
구리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청년 기술취득지원과정 신설), 시설 지원(청년창업센터), 현금성 수당(청년도약계좌, 취약계층 청년지원)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지원(청년 정책 종합계획 시행, 청년 지원조례 제정) [주거] 이용자 지원(주택공급)

구분	영역별 공약사항
안성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청년창업 지원), 시설 지원(청년 창업캠퍼스) [주거] 이용자 지원(청년 쉐어하우스)
의왕시	[일자리와 소득] 현금성 수당(취업준비금)
포천시	[일자리와 소득] 시설 지원(청년 취·창업지원센터) [주거] 이용자 지원(공공농지, 주택 우선배정-청년 농 육성)
양평군	[일자리와 소득] 시설 지원(청년스타트업 육성지원센터), 현금성 수당(농촌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사업)
여주시	[일자리와 소득] 시설 지원(청년창업 지원센터)
동두천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청년 사업가 행정지원) [주거] 이용자 지원(주택공급)
과천시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취·창업 컨설팅), 현금성 수당(청년창업펀드)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지원(청년시민회의, 전문가 멘토링), 시설 지원(문화예술 공간)
가평군	
연천군	[일자리와 소득] 이용자 지원(청년 농업인 육성)

출처: 민효상, 이성욱(2022a). 〈표 9〉 재인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청년정책 공약은 평균 2.97개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일자리와 소득에 관련된 공약이 전체의 49%로 가장 많았으며,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공약은 각각 21%와 22%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책영역을 지원유형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뜻하는 '이용자 지원', 관련 시설 수립 및 지원에 해당하는 '시설 지원', 서비스가 아닌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와 소득 부문에서는 시설 지원과 돌봄 및 일상생활지원이, 주거에서는 이용자 지원이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 지원유형 및 정책영역별 청년정책 공약 분석결과

(단위: 개수 (%))

구분	일자리와 소득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주거	건강	전체
이용자 지원	16(17.4)	13(14.1)	17(18.5)	0	46(50)
시설 지원	19(20.7)	5(5.4)	0(0.0)	0	24(26.09)
현금성 수당	14(15.2)	3(3.3)	5(5.4)	0	22(23.91)
전체	49	21	22	0	92

출처: 민효상, 이성욱(2022a). 〈표 8〉 재인용.

〈표 2〉에 따르면 현금성 수당의 비율도 상당히 높지만, 청년 취·창업지원센터 등 청년 일자리 관련 시설의 운영, 청년 대상 주택공급과 같은 정책들이 가장 주요하게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시군의 차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민효상·이성욱, 2022a). 이는 곧 기초자치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정책목표 및 수단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지자체 청년정책 공약의 유사성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의 유사성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경기도 본청 및 31개 시군의 청년복지사업은 139개 사업의 약 4,859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본청(광역자체사업, 광역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청년복지사업수는 120개로 다소 감소하는 반면, 예산은 2,087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의 대표적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청년통장 등의 사업이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시군 자체사업은 예산 규모가 적은 사업들이 진행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사업상 평균 예산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경기 본청의 사업당 평균 예산은 146억원 정도임에 반해, 시군의 사업당 평균 예산은 17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복지사업은 일자리와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와 건강 분야의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주거정책과 관련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어 지방에서는 주거와 관련된 예산이 적게 나타날 수 있겠으나, 지방에서 주로 담당하는 복지서비스가 포함된 돌봄 및 일상생활지원 분야도 낮게 나타나는 것은 지방차원에서 청년복지를 위한 사업이 중앙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군별로 청년복지사업의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는 시군의 청년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 또는 유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동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유사성은 민선8기 기초지자체 당선인들의 선거공약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표 3〉 경기도 시군별 자체 청년복지사업

(단위: 백만원, 개)

구분	총 청년예산	자체 사업수	일자리와 소득			돌봄 및 일상생활지원			주거			건강		
			a	b	c	a	b	c	a	b	c	a	b	c
본청	277,184	19	8	1	5	3	1	1	0	0	0	0	0	0
수원시	21,672	4	1	0	0	1	1	0	1	0	0	0	0	0
용인시	15,391	4	1	0	0	1	1	0	1	0	0	0	0	0
고양시	24,975	4	2	1	0	1	0	0	0	0	0	0	0	0
성남시	17,210	8	3	0	1	1	0	2	1	0	0	0	0	0
화성시	10,253	4	3	0	0	1	0	0	0	0	0	0	0	0

구분		총 청년예산	자체 사업수	일자리와 소득			돌봄 및 일상생활지원			주거			건강		
				a	b	c	a	b	c	a	b	c	a	b	c
부천시		12,921	3	0	1	0	2	0	0	0	0	0	0	0	0
남양주시		7,078	3	1	2	0	0	0	0	0	0	0	0	0	0
안산시		11,053	4	3	0	0	0	0	0	0	0	1	0	0	0
평택시		9,427	12	4	1	2	4	0	0	0	0	0	1	0	0
안양시		694	0	0	0	0	0	0	0	0	0	0	0	0	0
시흥시		3,760	9	5	1	0	1	2	0	0	0	0	0	0	0
김포시		6,218	3	0	0	0	3	0	0	0	0	0	0	0	0
파주시		6,130	7	4	1	0	2	0	0	0	0	0	0	0	0
의정부시		6,518	2	0	0	0	2	0	0	0	0	0	0	0	0
광주시		4,244	1	1	0	0	0	0	0	0	0	0	0	0	0
광명시		6,612	11	2	1	1	6	1	0	0	0	0	0	0	0
하남시		3,079	2	1	0	0	1	0	0	0	0	0	0	0	0
군포시		1,862	0	0	0	0	0	0	0	0	0	0	0	0	0
오산시		5,490	4	2	1	0	1	0	0	0	0	0	0	0	0
양주시		2,544	1	0	0	0	1	0	0	0	0	0	0	0	0
이천시		3,416	1	1	0	0	0	0	0	0	0	0	0	0	0
구리시		3,343	2	1	1	0	0	0	0	0	0	0	0	0	0
안성시		4,452	2	1	0	0	1	0	0	0	0	0	0	0	0
의왕시		3,717	4	2	0	0	2	0	0	0	0	0	0	0	0
포천시		2,969	6	1	0	0	4	0	1	0	0	0	0	0	0
양평군		4,601	4	2	1	0	1	0	0	0	0	0	0	0	0
여주시		2,478	7	1	0	1	3	1	0	0	0	1	0	0	0
동두천시		1,591	2	0	0	0	2	0	0	0	0	0	0	0	0
과천시		1,226	2	0	0	0	1	1	0	0	0	0	0	0	0
가평군		1,763	0	0	0	0	0	0	0	0	0	0	0	0	0
연천군		2,058	4	4	0	0	0	0	0	0	0	0	0	0	0
총계	본청포함	485,929	139	54	12	10	45	8	4	3	0	2	1	0	0
	본청제외	208,745	120	46	11	5	42	7	3	3	0	2	1	0	0
평균	본청포함	15,185	4.34	1.69	0.38	0.31	1.41	0.25	0.13	0.09	0.00	0.06	0.03	0.00	0.00
	본청제외	6,734	3.87	1.48	0.35	0.16	1.35	0.23	0.10	0.10	0.00	0.06	0.03	0.00	0.00

주: a=이용자 지원, b=시설 지원, c=현금성 수당
출처: 민효상·신동길(2021)의 복지사업 및 예산분류기준에 따라 저자 재계산

2. 지역 내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반한 청년정책 수립의 필요성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과 달리, 기초단위에서는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오재호 외, 2018). 청년정책의 구성과 내용이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인구 특성에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정책을 구성하여 추진할 시에는 지역 주민의 정책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매우 어렵다.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특히 정부 정책 수립 시 지역 내 인구규모, 구성, 분포 등을 중요시해야 함을 고려하면(김정인, 2019), 지역 내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정책대상집단으로서의 청년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정부, 특히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정책에 유사성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정책대상인 청년을 '일자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으로 묶어서 정의함과 동시에 지역별 청년인구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제시된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청년정책 현황과 관련 선거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청년층 내부에 여러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단일한 집단을 묶어서 파악하고 있으며(정기용 외, 2022; 채병주·황선재, 2021), 이로 인해 지역 내 청년인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수립에 큰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청년은 정책대상으로서 단일하게 파악될 수 있는 집단이며, 경기도 시군별 청년인구의 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 중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와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연구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연구들은 그동안 청년층을 단일집단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하여 이들이 처한 차별적 현실을 분석하고 세분화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김승연·박민진, 2021; 김안나·홍현우, 2018; 박나리·김교성, 2021; 유정미, 2017; 정기용 외, 2022; 주희진·주효진, 2017; 채병주·황선재, 2021).

청년인구 내부의 이질성에 대한 대표적 연구인 채병주·황선재(2021)의 연구는 청년 중에서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이에 따른 복지선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청년인구는 객관적 지위(소득지위, 교육지위, 노동지위), 주관적 지위(소득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미래지위(내년 가구재정 예측, 계층이동가능성)에 따라 총 5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로 일자리, 주거, 생활 등에 관련된 복지수요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1인 가구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정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평균의 함정'에 빠져 꼭 필요로 하는 정책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중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희진·주효진(2017)의 연구는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청년 고용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청년실업자의 다양한 특성에 근거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청년실업집단을 구직활동 여부와 취업의사, 구직 비활동 이유에 따라 구직형과 기회추구형, 단절형, 포기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 중 취업의사와 구직의사가 없는 포기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정책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청년 실업층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김수정(2020)의 연구는 청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 지위, 학력, 실업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못할 경우, 빈곤의 위험에 놓인 청년층을 파악하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중 상대적으로 소수만이 결혼으로 이행하고 이들 기혼 청년의 빈곤위험이 미혼 청년에 비해 더 낮다는 점을 설명하며, 청년 빈곤 예방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수립 시 이와 같은 차이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청년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이질성과 동질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정기용 외(2022)의 연구도 경기도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청년인구는 인구사회경제적 요인들(성별, 연령, 결혼유무, 소득, 직업, 학력)에 따라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책 영역에도 차이가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청년인구는 '평균형', '성취형', '미래준비형', '자기만족형', '불안형'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모든 유형에서 금전 및 경제지원정책 수요가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지원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되 문화·여가, 삶의 질, 참여·권리 등의 영역의 정책수요는 집단별로 다른 만큼, 유형별 이질적인 특성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박미선(2022)은 주거 측면에서 부부, 단독, 기타 동거 등 청년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그 실태와 정책적인 요구가 다르므로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주거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변미리 외(2008)는 도시정책 관련 수요에 청년가구의 형태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민희 외(2015)에서는 청년의 여가활동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다양성이 조명되었는데, 청년가구의 특성에 따라 가족 가치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들에서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으며(이현정·김영주, 2018; 주휘정·김민석, 2018),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년을 단일집단이 아닌

다양한 욕구를 지닌 정책집단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실제 청년정책, 특히 기초 지자체 수준의 정책이 청년의 이질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과 지방정부 수준의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데, 그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대표적인 연구로는 경기도 청년의 인구사회경제적 다양성에 따른 청년정책 선호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분석한 정기용 외(2022)의 연구와 청년구직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청년층 내부의 다양성을 분석한 김도균 외(2017)의 연구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보다 세부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연구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청년층 내부의 이질성 및 정책수요 차이는 설명하였지만 지역별로 청년인구 유형별 분포 현황 등 시군구 별로 청년인구집단 분포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청년의 정책선호 차이를 분석하고는 있지만 이를 해당 지방정부에서 제시한 청년정책과 비교하여 지역 내 청년집단의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청년인구의 특성과 청년정책에 대해 분석해봄으로써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 수준에서 성공적인 청년정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청년인구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청년인구의 유형별 생활 실태 및 정책수요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현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민선8기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공약이 지역 내 청년인구의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 청년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및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세부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경기도 청년인구를 사회경제적 특성(소득, 교육, 노동 지위)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 현황을 살펴본 후, 세 번째로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 지역 내 청년인구의 분포 현황과 특성을 잘 반영

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맞춤형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의 두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2021년 상반기에 발표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경기도 청년인구를 소득, 교육, 노동지위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에 따른 시군별 청년인구 분포현황을 살펴보았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는 전국 23만 4천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고용지위 및 종사산업·직업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시군 단위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 세분화된 지역단위의 고용현황을 제공하는 고용통계현황 중 가장 많은 표본 가구수가 대상이다(김을식, 2010).

경기도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반한 유형별 생활 실태현황 및 정책수요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2021년에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경기도 내 청년계층에 대한 일자리, 주거, 경제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지원사업 및 각종 정책수립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 거주중인 만19~34세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민효상·이성욱, 2022b). 총 5,000명 조사 대상을 31개 시군별 최소표본(각 150표본)으로 임의할당 후 잔여표본에 대해서 비례할당을 시도하였고, 「경기도 사회조사」와는 달리 시군단위로 청년인구의 복지수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청년인구의 유형화를 시도한 대표적 연구인 채병주·황선재(2021)의 연구나 정기용 외(2022)의 연구는 모두 하나의 조사자료만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자료만을 가지고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할 경우 각 조사의 표본에 따라 유형화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만을 사용하여 청년인구 유형화 및 시군별 청년인구 분포현황을 살펴볼 경우, 시군별 표본수가 지나치게 작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많은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청년집단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화의 결과를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의 청년집단 유형화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단위의 고용현황을 제공하는 통계자료 중 가장 많은 수의 표본을 지닌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시군별 청년인구 분포현황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두 자료를 분석에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청년인구는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결혼하지 않은 미혼청년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의 특성과 청년정책 간의 정합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민선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주요 청년정책 공약분석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에 관련된 공약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그 외에는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에 관한 정책공약들이었다. 기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신혼부부 및 돌봄정책의 영역으로 분류되며 결혼여부에 따라 정책수요에 따른 차이가 존재(이현정·김영주, 2018)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미혼청년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인구이지만, 주요 사회경제적 특성인 소득, 교육, 노동지위를 바탕으로 청년인구의 유형화를 시도할 때에는 우리나라 청년인구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고용조사」 내 전국 38,68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유형화 분류 후에, 경기도 내 거주하는 7,54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별 청년인구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았다. 「지역별 고용조사」중 경기도 내 거주하는 청년인구 7,540명의 응답자 현황은 〈표 4〉와 같다.

〈표 4〉 「지역별 고용조사」 연구표본의 특성(N=7,540명)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121	54.66	노동지위	상용직(자영업자포함)	4,143	54.95
	여성	3,419	45.34		임시직/일용직	978	12.97
연령	19~24세	2,294	30.42		무직(비경제활동인구포함)	2,419	32.08
	25~29세	3,273	43.41				
	30~34세	1,973	26.17	소득지위	100만 원 미만	2,647	35.11
교육지위	고등학교 졸업이하	1,981	26.27		100~199만 원	903	11.98
	대학교 2, 3년제	1,879	24.92		200~299만 원	2,551	33.83
	대학교 4년제	3,507	46.51		300~399만 원	810	10.74
	대학원 이상	173	2.29		400만 원 이상	629	8.34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는 총 5,000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 기혼자 922명과 학생 753명을 제외한 3,310명이 청년인구의 유형별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차이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표본의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 연구표본의 특성(N= 3,310명)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071	32.36	노동 지위	상용직 (자영업자포함)	1,977	59.73
	여성	2,239	67.64		임시직/일용직	654	19.76
연령	19~24세	497	15.02		무직(비경제활동인구포함)	679	20.51
	25~29세	1,479	44.68				
	30~34세	1,334	40.3	소득 지위	100만 원 미만	786	23.75
교육 지위	고등학교 졸업이하	468	14.14		100~199만 원	497	15.02
	대학교 2, 3년제	869	26.25		200~299만 원	1,381	41.72
	대학교 4년제	1,811	54.71		300~399만 원	467	14.11
	대학원 이상	162	4.89		400만 원 이상	179	5.41

3. 연구방법 및 변수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청년인구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유형별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업, 교육수준, 소득, 빈곤 등 다양한 변수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분석하고자 시도했던 기존 연구들(이진숙·이윤석; 2014, 이현정·김모윤, 2019; 최홍철 외, 2016)에서 사용한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소득, 교육, 노동수준과 관련된 변수(Baker, 2014)인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최종학력, 종사상의 지위를 청년인구 유형화를 위한 기준변수로 삼았다.

소득지위는 지난 평균 3개월간의 소득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만19세 이하 청년의 평균소득은 96만원, 만 20~24세 청년은 173만원, 만 25~29세 청년은 258만원, 만 30~34세 청년은 319만원으로[3], 이와 같은 청년인구의 소득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연구들(정기용 외, 2022; 채병주·황선재, 2021)과 같이 100만원 단위의 5구간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교육지위는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네 구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정진철 외, 2022; 주희진·주효진, 2017). 노동지위는 종사상 지위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크게 상용직 및 자영업자, 임시직 및 일용직,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무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종사상의 지위는 임금불평등과 빈곤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년인구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김기헌 외, 2016; 김안나·홍현우, 2018). 만15세에서 29세 임금근로자

3) 국가통계포털, 성별 연령대별 소득, https://kosis.kr/index/index.do (접속일: 2022.9.6.)

청년들 중 비정규직 비율은 약 42%[4]에 달하기 때문에, 청년인구의 유형화 시 노동지위를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자발적 무업자 집단'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구직기간의 증가 혹은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해 비경제활동 청년인구는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실업이라고 볼 수 없고 실업집단에 포함시켜 분석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들(금재호 외, 2007; 이로미 외, 2010; 주희진·주효진, 2017)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노동지위를 상용직과 자영업자 및 고용주, 임시직과 일용직,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무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6〉 청년인구 유형화를 위한 기준 변수

소득지위	지난 3개월간 평균 소득 1=100만원 미만, 2=100만원~200만원 미만, 3=200만원~300만원 미만, 4=300만원~400만원 미만, 5=400만원 이상
교육지위	최종학력 1=고등학교 졸업 이하, 2=대학교(4년제 미만), 3=대학교(4년제), 4=대학원 이상
노동지위	종사상 지위 1=상용직/자영업자 및 고용주, 2=임시직/일용직, 3=무직(비경제활동인구 포함)

우리나라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위하여 〈표 6〉에 제시된 기준변수들에 근거하여 「지역별 고용조사」 내 전국 38,68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사전에 군집의 수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 분석대상들을 상호 관련성에 의해 동질적인 집단으로 결합하며 단계적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통계적 기법이다(안태후 외, 2015; 박선주, 2006; 이소정, 2009). 계층적 군집분석에 따라 소득, 교육, 노동지위를 기준으로「지역별 고용조사」 내 전국 38,689명의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세 집단으로 유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역별 고용조사」와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의 청년인구 표본을 세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5]

청년인구의 유형별 금융·자산, 주거, 일자리, 건강과 관련된 생활현황 차이 및 그에 따른 정책수요 차이에 관한 분석은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일원배치 분산분석

4) e나라지표 비정규직 고용동향 중 2021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분포, http://www.index.go.kr (접속일: 2022.9.6.)

5)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의 표본을 대상으로도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별 고용조사」와 같이 세 유형으로 군집이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유형화 결과가 신뢰할만하다 판단할 수 있다.

(One-way ANOVA)과 교차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영역 및 항목은 〈표 7〉과 같다. 이 후, 경기도 31개 시군별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고 이 결과를 앞서 검토했던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청년정책 공약과 비교분석 함으로써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 특성과 청년정책간의 정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의 정합성은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정책의 목적과 목표, 정책 대상, 서비스와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이 서로 간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유해미 외, 2017; 조은설, 2018). 본 연구는 정책정합성을 정책이 정책수요자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로 개념화하여(유해미 외, 2017), 경기도 기초지자체장들의 청년정책 공약들이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에 따른 정책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이 지역 내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 및 이에 따른 정책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 정책과 인구특성간의 정합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31개 지자체의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현황과 이에 따른 정책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공약의 차별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정책수요자의 정책수요와 정책 간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지자체장들의 청년정책 공약들이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에 따른 정책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인구와 청년정책 간의 정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청년 유형별 생활실태 현황 및 정책수요 차이 분석 변수

영역	항목	문항 및 측정방법
금융·자산	소득현황	3개월간 평균 월소득, 월지출, 월저축액(만원단위)
	소득만족도	월 소득 체감도(리커트 11점 척도, 0=매우부족함, 5=보통, 10=매우 충분함)
	부채부담	부채부담정도(리커트 11점 척도, 0=전혀느끼지 않음, 5=보통, 10=매우 많이 느낌)
	부채액수	총 부채액수(1=500만원 미만, 2=500~3000만원, 3=3000만원~1억원, 4=1억원 이상)
	부채원인	부채의 주요 원인 1순위(1=주거비(보증금, 월세, 주택구입비), 2=생활비, 3=학자금대출, 4=기타(취업준비, 해외연수, 창업자금, 결혼, 의료비, 차량구입비, 여행, 가족부양 등))
	필요 경제 지원정책	가장 필요한 청년경제지원정책(1=주거비 지원, 2=대출지원, 3=자금지원(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교육비 지원), 4=금융교육/지원(금융설계 교육 및 컨설팅, 신용회복교육, 목돈마련 저축상품 마련))
주거	주거비 부담	주거비 부담정도(리커트 4점 척도, 1=전혀부담되지 않음, 4=매우 부담됨)
	주거문제	현재 겪고있는 주거문제(1=비용부담(매입, 보증금 등), 2=월세부담(월세, 관리비 부담), 3=주거기간 미보장(계약기간 등), 4=주거시설(대중교통, 주차, 협소공간, 치안, 편의시설, 노후상태, 이웃갈등, 반려동물 어려움 등))
	필요 주거 지원정책	가장 필요한 청년 주거정책(1=비용지원(매입, 보증금, 월세대출 지원), 2=주거공급 및 확대(공동주거확대, 임대주택 공급, 저렴한 주거지 확대, 공공기숙사 확충), 3=주거환경개선(치안수준 강화), 4=임차인 보호제도 강화, 5=관련 정보제공(부동산, 임대주택 등 정보제공))

영역	항목	문항 및 측정방법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만족도	근로시간, 임금/급여수준, 고용안정성, 근로환경(복리후생 등), 적성과 흥미 부합도·업무성취감, 개인의 발전가능성, 직장문화·동료와의 친밀도, 통근시간·교통편의성(리커트 11점 척도, 0=매우불만족, 5=보통, 10=매우만족)
	일자리 선택기준	일자리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1=임금/급여수준, 2=고용안정성, 3=근로환경(근로시간, 복리후생, 직장문화, 동료 친밀도, 통근시간, 개인 자율성), 4=발전가능성(회사 성장가능성, 개인발전가능성, 적성과 흥미 및 성취감))
	청년 직장인 필요정책	청년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1=이직지원, 2=교육/자기계발, 3=노동/근무환경(노동인권센터 설치, 노동력 평가 및 보상체계 정책, 근로현장 실태 모니터링), 4=휴식 및 심리지원(심리상담, 재충전 지원))
건강	우울/심리적불안감	최근 3개월 이내 우울감 또는 심리적 불안감(리커트 11점 척도, 0=전혀 느끼지 않음, 5=보통, 10=매우 많이 느낌)
	신체건강	최근 1년간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리커트 5점 척도, 1=매우 건강하다, 3=보통이다, 5=전혀 건강하지 않다)
	청년건강 필요정책	청년 건강권 보장 위해 필요한 정책(1=건강검진, 2=심리지원(상담서비스, 스트레스 관리), 3=관계망 형성(소모임 지원, 인적 관계망 강화), 4=신체운동(운동 프로그램 확대))
복지 수요	필요정책분야[6]	현 거주지에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7개 분야: 고용, 주거, 금융, 여가, 건강, 결혼, 사회관계망(청년 관계망 강화, 청년 활동공간 마련))

Ⅳ. 분석결과

1. 경기도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정책수요 차이 분석

1) 경기도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

2021년 상반기에 조사된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전국 38,689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소득, 교육, 노동지위에 따라 청년집단을 유형화 한 결과, 청년인구는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7]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거주지역 내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 1순위와 2순위를 물어, 1순위에는 2점을 부여하고, 2순위에 1점, 순위에 들지 못한 영역에는 0점을 부여하여, 어느 영역에 가장 큰 선호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7) 유형별 명칭은 청년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을 분석한 대표연구인 채병주·황선재(2021)의 연구에서 차용하였다. 채병주·황선재(2021)의 연구는 청년 1인가구를 소득·교육·노동지위, 소득만족도, 주관적 계층의식, 내년가구재정 예측, 계층이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1차 노동시장에 안착한 '성취형', 고학력 저임금의 '불안형', 저학력 중소득의 '정착형', 다차원적 빈곤을 경험험하는 '소외형', 대학생 중심의 '희망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 및 분석자료의

〈표 8〉 청년인구의 유형별 구성비율과 특성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
구성비율	35%	24.82%	40.18%
소득지위	3.56	2.91	1.08
교육지위	2.94	1.43	2.24
노동지위	2.89	2.79	1.16

성취형은 소득, 교육, 노동의 세 기준에서 모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성취형은 대졸자 중심의 상용직 노동자로 평균소득은 300만원 중반대인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안정적인 소득과 직업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집단으로 전국 청년의 약 35%가 성취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정착형은 타 유형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고졸~2·3년제 대학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지위와 소득을 지니고 노동시장에 정착한 유형으로 전국 청년인구의 약 24.8%가 정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유형인 소외형은 모든 지위에서 낮은 값을 보이는 유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소외되는 집단이다. 소외형은 성취형보다는 낮지만, 정착형보다는 높은 교육수준(2·3년제 대학교~4년제 대학교)에도 불구하고, 무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르는 등 낮은 노동지위로 인해 소득지위도 매우 낮은 유형을 의미한다(전국 기준 약 40%).

〈표 9〉 사회경제적 유형에 따른 청년인구의 시도별 분포 현황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
서울	42.72	21.03	36.25
부산	36.22	19.58	44.2
대구	33.83	22.23	43.93
인천	28.47	30.91	40.62
광주	35.2	20.87	43.93
대전	37.12	21.48	41.4
울산	30.51	26.27	43.22
세종	54.01	20.44	25.55
경기	34.44	27.44	38.12
강원	35.12	24.34	40.54

특성에 따라 소득·교육·노동지위의 객관적 지위만을 가지고 청년인구를 유형화 한 결과, 세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각 유형의 특징이 채병주·황선재(2021)의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과 유사하게 나타나 이 명칭들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
충북	31.71	30.66	37.63
충남	30.9	29.24	39.86
전북	31.18	22.35	46.46
전남	32.26	26.82	40.92
경북	31.13	25.21	43.66
경남	32.18	26.6	41.21
제주	38.24	23.72	38.04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별 청년인구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54.01%)가 성취형 청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광역시(28.47%)의 성취형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은 서울(47.72%), 대전(37.12%), 부산(36.22%) 등의 지역이었으며,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은 전북(46.46%), 부산(44.2%), 대구(43.93%), 광주(43.93%), 경북(43.66%), 울산(43.22%)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성취형 청년인구비율은 전국 17개 시도가운데 7번째로 높았으며, 정착형은 4번째, 소외형은 1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청년들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성취형과 정착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년인구 유형별 생활 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앞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소득, 교육, 노동 지위에 따라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일자리, 주거, 금융, 건강과 관련된 생활실태 현황 및 그에 따른 복지수요에 차이가 있는지를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앞서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한 청년인구의 유형화가 신뢰성 있는 분석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의 미혼 및 비학생 청년인구 3,310명을 대상으로 소득, 교육, 노동지위에 따라 마찬가지로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의 청년인구도 「지역별 고용조사」와 마찬가지로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표 10〉의 결과와 같이 각각의 유형별 특징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청년인구의 유형화 및 특징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년인구의 유형화 결과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0〉 「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의 청년인구의 유형별 구성비율과 특성[8)]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
구성비율	42.08%	26.59%	31.33%
소득지위	3.54	2.74	1.3
교육지위	2.99	1.77	2.47
노동지위	2.84	2.8	1.44

(1) 금융·자산 현황 및 관련 정책수요 차이 분석

청년인구 유형별 월 소득, 월 지출, 월 저축액, 주관적 소득지위, 부채부담인식 정도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유형간 평균값 차이를 분석하고, 부채액수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해 청년인구의 유형별 금융·자산 실태와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청년 경제지원 정책에서도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1〉 청년인구 유형별 금융·자산 현황 및 관련 정책수요

	유형	표본수(명)	평균(만원, 점)	표준편차	F	유형별 차이
월소득	성취형(A)	1,393	293.09	114.72	2096.43***	A>B>C
	정착형(B)	880	215.51	68.25		
	소외형(C)	1,037	55.66	64.46		
월지출	성취형(A)	1,393	151.33	94.60	409.54***	A>B>C
	정착형(B)	880	123.26	67.32		
	소외형(C)	1,037	46.12	102.40		
월저축	성취형(A)	1,393	111.79	80.79	649.77***	A>B>C
	정착형(B)	880	74.19	65.67		
	소외형(C)	1,037	16.38	29.67		
소득 만족도	성취형(A)	1,393	4.91	2.22	103.79***	A>B>C
	정착형(B)	880	4.35	2.51		
	소외형(C)	1,037	3.49	2.54		
부채 부담	성취형(A)	1,393	4.91	2.22	103.79***	A>B>C
	정착형(B)	880	4.35	2.51		
	소외형(C)	1,037	3.49	2.54		

8) 「지역별 고용조사」와 달리(성취형 인구비율-34.44%),「경기도 청년가구 실태조사」에서는 성취형 비율이 42.08%로 높다.. 이는 상용직 인구비율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에서 추정할 수 있다.

비율(%)		500만원 미만	500~3000만원	3000만원~1억원	1억원 이상	x^2
부채 액수	성취형(A)	17.66	36.96	31.79	13.59	47.49***
	정착형(B)	22.36	41.06	26.83	9.76	
	소외형(C)	36.28	44.19	14.42	5.12	
	합계	23.88	40.05	25.81	10.25	
비율(%)		주거비	생활비	학자금대출	기타 (여가, 가족부양 등)	x^2
부채 원인	성취형(A)	42.93	16.58	19.02	21.47	59.54***
	정착형(B)	35.37	23.58	18.7	22.36	
	소외형(C)	18.14	26.51	38.6	16.74	
	합계	34.26	21.23	24	20.51	
비율(%)		주거비지원	대출지원	자금지원	금융교육/지원	x^2
필요 경제지원 정책	성취형(A)	43.8	14.79	12.63	28.79	78.38***
	정착형(B)	40.77	15.26	14.92	29.04	
	소외형(C)	39.16	10.79	25.56	24.49	
	합계	41.54	13.67	17.28	27.51	

주: ***p<0.01, **p<0.05, *p<0.1

〈표 11〉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은 유형별로 금융·자산 현황 및 관련 정책수요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3개월간의 월 소득·지출·저축액을 살펴본 결과, 세 유형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수준에서 성취형이 가장 높은 수준, 소외형이 가장 낮은 수준의 월 소득·지출·저축액을 보였다. 소득만족도는 매우 부족함에서 매우 충분함을 11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성취형-정착형-소외형 순의 소득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에 대한 실태조사는 부채 액수와 부채부담 인지 정도에 대해 나누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성취형은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하여 3000만원 이상의 큰 액수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착형은 대부분 5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외형은 대부분 3000만원 미만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은 부채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한 인식을 11점 척도로 조사하였는데, 성취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부채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소외형은 세 유형중 가장 낮은 수준의 부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성취형이 상대적으로 부채 액수가 크기 때문이고, 소외형은 적은 액수의 부채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성취형이 가장 큰 부채액수와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부채의 원인이 대부분 주거비(보증금/월세/주거구입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며, 소외형은 대부분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인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형은 상대적으로 주거비로 인한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의 표본 중

청년 1인가구의 대다수는 성취형이고 소외형 청년 1인가구는 매우 적은 비율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 정책에는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성취형은 주거비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외형은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이나 학자금, 교육비 지원 등 자금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유형별 부채의 원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주거 현황 및 관련 정책수요 차이 분석

주거비 부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주거문제, 필요 주거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의 주거비용과 주거정책의 경우, 소득·교육·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1인가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주거 현황 및 주거관련 정책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9)]

〈표 12〉 청년인구 유형별 주거 현황 및 관련 정책수요

		표본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F	유형별 차이
주거비 부담	성취형(A)	1,009	2.69	0.95	0.03	유의미성 없음
	정착형(B)	623	2.68	0.93		
	소외형(C)	599	2.69	1.00		
비율(%)		매입, 보증금 부담	월세부담	주거기간보장	주거시설	x^2
주거 문제	성취형(A)	13.78	23.98	42.02	20.22	9.42
	정착형(B)	14.29	21.67	45.75	18.3	
	소외형(C)	16.53	20.03	40.9	22.54	
	합계	14.66	22.28	42.76	20.3	
비율(%)		비용지원	주거공급확대	주거환경개선	임차보호	관련 정보제공
필요 주거 정책[1)]	성취형(A)	31.99	50.37	6.59	4.69	6.37
	정착형(B)	35.47	47.79	5.93	4.19	6.63
	소외형(C)	32.4	53.24	4.89	3.99	5.48
	합계	33.04	50.57	5.88	4.34	6.16

1): x^2 값은 9.56으로 유형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음

9) 본 연구의 자료를 대상으로 청년층 1인가구와 비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주거문제, 필요주거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주거관련 정책수요의 파악은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1인 가구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일자리 현황 및 관련 정책수요 차이 분석

분석대상 청년들 중 상용직/자영업/고용주 비율은 59.73%, 임시직/일용직은 19.76%, 비취업자/무급가족 종사자 등은 20.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 유형별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점을 분석해 본 결과, 유형별 차이점은 근로시간을 제외한 임금/급여수준, 고용안정성, 근로환경, 적성과 흥미부합도·업무성취감, 개인의 발전가능성, 직장문화 및 동료와의 친밀도, 통근시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세 유형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였는데, 고용안정성에 대해 성취형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소외형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간 일자리 선택기준의 차이점을 분석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집단 간 선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성취형은 임금·급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정착형은 고용안정성, 소외형은 발전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에게 필요한 일자리 관련 정책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13〉 청년인구 유형별 일자리 만족도 및 관련 정책수요

		표본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F	유형별 차이
근로시간	성취형(A)	1,335	6.13	2.23	2.96	
	정착형(B)	831	6.08	2.13		
	소외형(C)	380	6.23	2.13		
임금/급여수준	성취형(A)	1,335	5.32	2.22	4.69**	A>B
	정착형(B)	831	5.02	2.35		
	소외형(C)	380	5.30	2.37		
고용안정성	성취형(A)	1,335	6.35	2.22	34.93***	A>B>C
	정착형(B)	831	5.94	2.29		
	소외형(C)	380	5.26	2.47		
근로환경 (복리후생 등)	성취형(A)	1,335	5.69	2.19	8.15 ***	A>B, A>C
	정착형(B)	831	5.36	2.27		
	소외형(C)	380	5.28	2.28		
적성과 흥미 부합도, 업무성취감	성취형(A)	1,335	5.81	2.09	8.39***	A>B, A>C
	정착형(B)	831	5.41	2.22		
	소외형(C)	380	5.65	2.33		

		표본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F	유형별 차이
개인의 발전가능성	성취형(A)	1,335	5.53	2.15	11.14***	A>B, A>C
	정착형(B)	831	5.12	2.35		
	소외형(C)	380	5.09	2.42		
직장 문화, 동료와의 친밀도	성취형(A)	1,335	6.24	1.97	7.16***	A>C, B>C
	정착형(B)	831	6.11	2.08		
	소외형(C)	380	5.79	2.34		
통근시간, 교통 편의성	성취형(A)	1,335	5.88	2.42	2.83*	A>B
	정착형(B)	831	6.12	2.47		
	소외형(C)	380	6.10	2.57		
비율(%)		임금, 급여	근로환경	고용안정성	발전가능성	x^2
일자리 선택기준	성취형(A)	45.01	11.41	30.29	13.28	23.45***
	정착형(B)	44.77	9.89	35.23	10.11	
	소외형(C)	39.67	11.97	32.24	16.12	
	합계	43.28	11.18	32.22	13.33	
비율(%)		이직지원	교육/자기계발	노동/근무환경 개선	휴식 및 심리지원	x^2
청년 직장인 필요정책	성취형(A)	15.47	49.4	18.32	16.82	8.86
	정착형(B)	13.92	50	15.74	20.34	
	소외형(C)	16.67	51.85	15.34	16.14	
	합계	15.14	49.96	17.03	17.86	

주: ***p<0.01, **p<0.05, *p<0.1

(4) 신체·정신건강 현황 및 관련 정책수요 차이 분석

네 번째로 청년층의 유형별 신체·정신건강 현황 및 관련 정책수요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외형 청년들일수록 우울감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건강의 경우, 청년층은 대부분 신체건강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형 청년은 다른 유형보다 신체 건강상의 어려움 정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정책수요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소외형 청년이 신체·정신건강 측면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나 금융관련 정책과 달리 건강 관련 정책수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소외형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및 금융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표 14〉 청년인구 유형별 건강 현황 및 관련 정책수요

	유형	표본수	평균(점)	표준편차	F	유형별 차이
우울/ 심리적 불안감	성취형(A)	1,393	5.89	2.10	24.49***	C〉B〉A
	정착형(B)	880	6.17	2.23		
	소외형(C)	1,037	6.52	2.28		
신체건강	성취형(A)	1,393	2.52	0.90	22.31***	C〉B, C〉A
	정착형(B)	880	2.58	0.98		
	소외형(C)	1,037	2.78	1.02		
비율(%)		건강검진	심리 지원	관계망 형성	신체운동	x^2
청년 건강 필요 정책	성취형(A)	48.59	35.83	10.31	5.26	7.56
	정착형(B)	49.6	35.04	8.19	7.17	
	소외형(C)	47.43	35.31	10.57	6.69	
	합계	48.5	35.46	9.83	6.22	

주: ***p〈0.01, **p〈0.05, *p〈0.1

(5) 청년인구 유형별 정책수요 차이 분석

마지막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청년인구 유형별로 정책선호분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용, 주거, 금융, 여가, 건강, 결혼, 사회관계망 7개 정책 분야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떤 정책영역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소외형 청년들은 고용과 관련된 정책영역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나 여가, 결혼, 사회관계망 등 기타 영역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용과 소득이 안정된 성취형과 정착형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생활 실태 및 정책수요에는 차이가 명확히 존재함을 보여주며, 이는 지자체 내 청년 정책 수립 시 지역 내 청년인구 특성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15〉 청년인구 유형별 정책선호분야

	유형	표본수	평균(점)	표준편차	F	유형별 차이
고용	성취형(A)	1,393	0.52	0.82	49.74***	C〉A, C〉B, B〉A
	정착형(B)	880	0.60	0.86		
	소외형(C)	1,037	0.86	0.91		
주거	성취형(A)	1,393	1.04	0.90	3.44**	A〉C
	정착형(B)	880	1.03	0.88		
	소외형(C)	1,037	0.95	0.85		

	유형	표본수	평균(점)	표준편차	F	유형별 차이
금융	성취형(A)	1,393	0.49	0.74	0.78	
	정착형(B)	880	0.51	0.76		
	소외형(C)	1,037	0.47	0.72		
여가	성취형(A)	1,393	0.36	0.65	3.47**	A>C
	정착형(B)	880	0.33	0.64		
	소외형(C)	1,037	0.29	0.62		
건강	성취형(A)	1,393	0.12	0.38	0.51	
	정착형(B)	880	0.11	0.37		
	소외형(C)	1,037	0.11	0.38		
결혼	성취형(A)	1,393	0.16	0.44	5.18***	A>C
	정착형(B)	880	0.14	0.40		
	소외형(C)	1,037	0.10	0.36		
사회 관계망	성취형(A)	1,393	0.28	0.55	8.01***	A>C, B>C
	정착형(B)	880	0.26	0.53		
	소외형(C)	1,037	0.19	0.46		

주: ***p<0.01, **p<0.05, *p<0.1

2. 경기도 31개 시군별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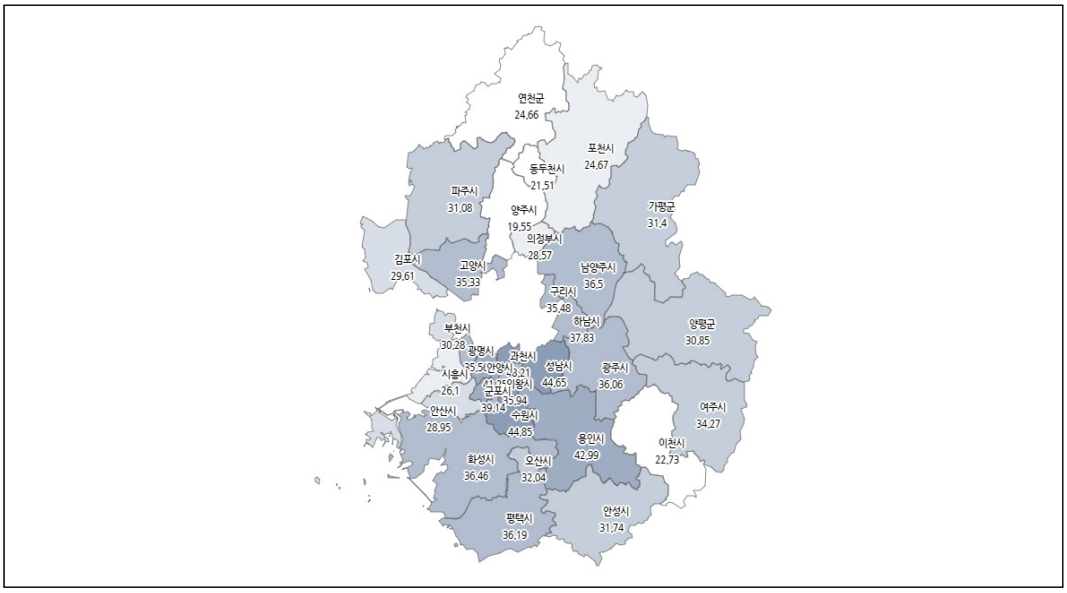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청년인구는 소득, 교육, 노동 지위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크게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유형별로 생활 실태 및 정책수요에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렇다면, 경기도 31개 시군 내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현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1>과 같이 경기도 시군별 성취형 청년인구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 평균(34.44%)보다 성취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은 과천시(48.21%), 수원시(44.85%), 성남시(44.65%), 용인시(42.99%), 안양시(41.25%)로 나타났고, 반대로 성취형 인구의 비율이 낮은 곳은 이천시(22.73%), 동두천시(21.51%), 양주시(19.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 시군별 정착형 청년인구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그림 2>와 같이 경기도 평균(27.44%)보다 높은 지역은 이천시(47.47%), 포천시(44%) 등의 지역으로 나타났고, 정착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낮은 곳은 과천시(10.27%), 양평군(20.21%), 수원시(20.36%), 군포시(20.8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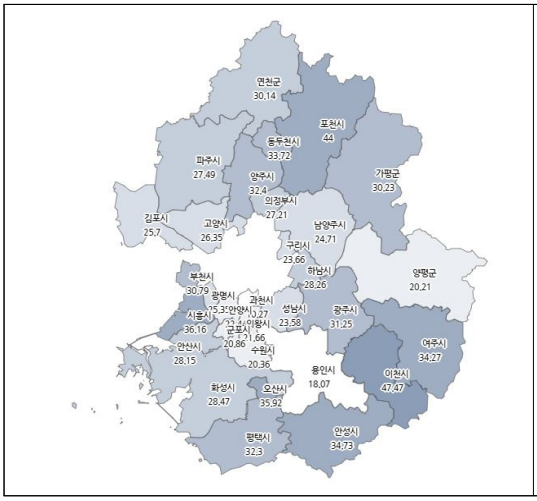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경기도 시군별 소외형 청년인구의 분포현황을 <그림 3>과 같이 살펴본 결과,

경기도 평균(38.12%)보다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양평군(48.94%), 연천군(45.21%), 양주시(48.04%), 김포시(44.69%), 의정부시(44.22%)였으며,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낮은 곳은 이천시(29.7%), 여주시(31.47%), 평택시(31.52%), 포천시(31.33%), 성남시(31.76%), 광주시(32.6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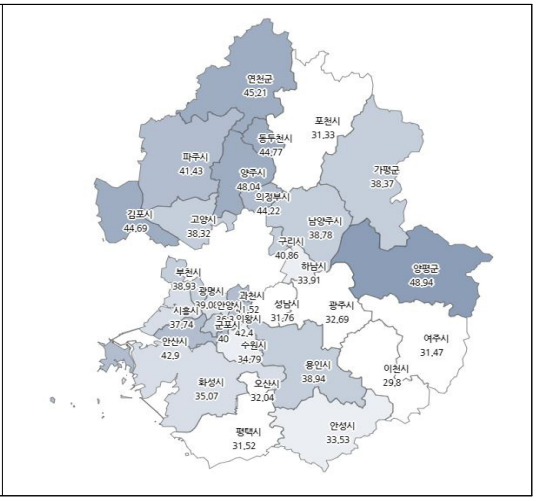
〈그림 1〉 시군별 성취형 분포현황



〈그림 2〉 시군별 정착형 분포현황



〈그림 3〉 시군별 소외형 분포현황



경기도 청년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포현황을 31개 시군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인구는 상이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용인시 등의 지역은 성취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고, 이천시는 정착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연천군, 양평군, 양주시, 김포시 등의 지역은 소외형 청년인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지역 내 청년인구 유형에 따른 청년들의 생활현황 실태 및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지역별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주는 분석결과라 볼 수 있다.

3. 경기도 시군별 청년인구 특성과 청년정책 공약 간의 차이 분석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년인구는 주요 사회경제적인 특성인 소득, 교육, 노동 지위에 따라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 될 수 있으며, 유형별로 생활 현황 및 정책수요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두 번째, 타 시도와 비교하면 경기도의 경우 성취형 청년인구와 정착형 청년인구 비율이 높고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 31개 시군별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명확한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런 특성 차이에 따른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정책 수립 시에는 청년층의 이질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점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청년관련 연구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시군별 청년인구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수립 시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의 특성과 복지수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민선8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청년정책 공약들은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인구특성과 정책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선거에 비해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공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시군 평균 2.97개로 청년정책 관련 공약이 많지 않은 가운데, 그마저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창·취업 센터 및 현금성 수당이 주된 공약들로 제시되었고, 지역에 특화된 청년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고양시, 김포시, 가평군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청년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특별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포시의 경우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44.69%)을 생각해보면, 지역의 소외형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외형 청년들의 비율이 높은 연천군(45.21%)의 경우에도 지자체장의

청년정책 공약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그치고 있으며, 소외형 청년 비율이 높은 타 지역인 의정부시(44.22%)와 양평군(48.94%)의 경우에는 청년 창업과 관련된 시설지원이 주된 공약이라 청년취업 및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소외형 청년의 경우, 금융지원정책으로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정책과 관련된 정책분야에 선호가 높은 동시에 높은 우울 및 심리적 불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정책과 지원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내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함에도 현재 민선8기 지자체 당선인들의 공약에는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비전과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성취형 청년인구의 비율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정착형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동두천시(33.72%), 시흥시(36.16%), 포천시(44%), 이천시(47.47%)의 경우에도 주요 청년정책 공약으로는 일자리지원 관련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지만, 정착형 청년들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생산직 노동자가 대부분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집단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제일 크게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이 소외형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 만족도 분석에서도 정착형 청년들은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고용안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생각해 보면, 정착형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정책에 기반한 청년층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20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재정 특성을 분석한 민효상·신동길(2021)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대부분 광역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뉴딜사업 등의 예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기초자체사업의 비중이 시군평균 4.1개임에도 평균예산은 9.5억으로 사업당 평균 2.32억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회복지사업지출에서 특정 사업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정책헌신도(policy commitment)(윤성원·양재진, 2019)를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정책헌신도를 분석해보면 청년복지의 경우,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7%에 머물러 대상자 인구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청년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과 집중이 매우 낮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민효상·신동길, 2021). 이런 상황에서 2022년 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선8기 지자체장들의 청년정책 공약에서도 기존 정책들과의 큰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으며,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V. 결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역과 관련된 정책과 공약을 세울 때 지역민들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지자체 단체장들의 선거 공약이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민선8기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분석함과 동시에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함께 분석하여, 정책과 현장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년인구 유형화 작업 및 유형별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분석, 경기도 시군별 청년인구 분포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청년인구를 소득·교육·노동의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회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유형화 한 결과, 청년인구는 성취형, 정착형, 소외형의 세 집단으로 유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형은 대졸자 중심의 상용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한 집단이다. 정착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노동지위와 소득을 지닌 집단을 의미하고, 소외형은 정착형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지위에도 불구하고 무직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물러 노동시장과 소득지위에서 소외되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 성취형 청년인구는 35%, 정착형 청년인구는 24.82%, 소외형 청년인구는 40.18%로 나타났으며, 이에 소외형 청년인구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유형화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금융·자산, 주거, 일자리, 건강의 네 분야에 대한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정책영역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현황과 관련하여, 성취형은 월소득·지출액·저축액이 다른 두 유형보다는 높지만, 주거비(보증금/월세/주택구입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고 이로 인해 높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지출액·저축액을 보이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액수를 지니고 있지만 그 부채들이 대부분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자산형성(주택비)과 관련된 부채가 있는 성취형보다 부채원인이 더 취약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소외형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경제지원 정책은 주거비 지원이나 대출지원보다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나 학자금 지원과 같은 현금성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현황과 관련해서는 주거비 부담이나 경험하고 있는 주거문제, 주거관련 필요 정책에 대해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청년의 주거문제와 관련 정책수요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1인가구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일자리 현황의 경우, 성취형 청년이 다른 유형보다 급여수준, 고용안정성,

근로환경, 발전가능성 등에 높은 만족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청년 직장인 필요정책과 관련해서는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청년인구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소외형 청년인구가 타 유형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우울 및 심리적 불안감과 신체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선호정책의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종합적으로 청년인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외형 청년들은 고용과 관련된 정책영역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지위 및 소득지위의 성취형과 정착형 청년들은 주거, 여가, 결혼, 사회관계망 등의 영역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청년인구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 내부에 명확한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런 이질성은 청년인구의 생활실태 및 관련 정책수요의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지역 내 청년정책 수립 시 지역 청년인구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준다. 경기도 31개 시군별 청년인구의 유형별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취형 청년인구가 높은 곳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과천시, 용인시였고, 정착형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은 이천시, 포천시였으며,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은 양평군, 연천군, 양주시, 김포시, 의정부시였다. 31개 시군의 청년인구 유형별 분포현황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 추진 시에는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책수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선8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의 청년정책 공약은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청년정책 공약은 평균 2.97개로 지역에 특화된 청년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창업지원 센터 등의 시설지원 정책이나 일부 현금성 수당이 주된 공약들로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소외형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은 김포시에는 청년관련 공약이 부재하였고, 소외형 청년 비율이 높은 연천군, 의정부시, 양평군에서도 실효성 있는 공약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소외형 청년인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노동과 소득지위에서 배제될 경우 노동시장 안착이 점점 어려워지고, 추후 중장년기의 빈곤으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소외형 청년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하거나 주변의 일자리가 모여 있는 지자체로의 통근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하는 등 지역 밀착형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공약은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대상 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진형익, 2022), 현재의 경기도 시군 청년정책들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6월 전국지방선거 후 민선8기 지방정부가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지역 내 청년인구의 특성에 기반하여 공약의 구체화 작업과 지역 청년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상준·박민규·김영진. (2020). 투표율 상승은 어떠한 정책변화를 가져오는가?. 「한국정책연구」, 20(2): 1-22.

금재호·전용일·조준모. (2007). 「한국형 니트(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정책연구보고서)」. 서울: 노동부.

김기헌·하형석·신인철. (201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도균·최석현·유보배. (2017).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연구」, 2017-22. 경기연구원.

김동욱. (2020). 지방 청년 정책을 통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구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정책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184-210.

김병규·박성만·이곤수·조덕호. (2009). 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 PCSE 모형을 이용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1(3): 65-83.

김수정. (2020).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한국인구학」, 43(2): 77-101.

김승연·박민진. (2021).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정책리포트」, 제326호, 서울연구원.

김안나·홍현우. (2018).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49(2): 93-124.

김을식. (2010). 지역 고용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2010-09, 경기개발연구원.

김정인. (2019).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지방의원 다양성과 대표성 연구: 경기도 지방의원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3(4): 101-126.

민효상·신동길, (2021). 「경기도 복지재정 특성분석 및 예산분류체계 개선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민효상·이성욱. (2022a).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복지분야 주요 공약내용 및 함의. 「복지이슈 Focus」, 07. 경기복지재단.

민효상·이성욱. (2022b). 「경기도 청년실태조사 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박나리·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 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45-74.

박미선. (2022). 청년 가구 유형에 기초한 주거 여건 분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5: 30-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선주. (2006). 지역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유형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0(1): 118-135.

변미리·신상영·조권중·박민진.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213.

신경아·김정은·한미정. (2018).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의도를 이끄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치 대화와 투표자 우대 제도, 내재적·외재적 정치 효능감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2(4): 1-29.

안태후·김화환·김종민·이태수. (2015).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소지역 분류 및 유형화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9(2): 229-240.

오재호·이상훈·신기동·강현철·최재용·천영석·박누리. (2020). 경기도 청년정책 개선 방향. 「정책연구」, 2020-14, 경기연구원.

우민희·이명진·최샛별. (2015). 청년세대 일인가구의 여가활동 및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청년세대 다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6(1): 201-231.

유정미. (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107-155.

유해미·최효미·강신혜. (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2017-15. 육아정책연구소.

윤성원·양재진. (2019). 한국의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에 자체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가?: 2017년 지방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초연구. 「사회과학논집」, 50(2): 117-140.

이로미·박가열·정연순. (2010).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구직 희망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3(1): 153-175.

이소정. (2009).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한국인구학」, 32(1): 71-91.

이승윤·백승호·김미경·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이진숙·이윤석. (2014). 비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여성과 남성의 교제활동 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1-24.

이현정·김모윤. (2019). 청년층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수준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0(4): 55-64.

이현정·김영주. (2018).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청년층 가구의 사회경제적 차이 및 주택자산효과 분석. 「도시행정학보」, 31(2): 73-95.

임진영·서정욱·민효상. (2018).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2(3): 65-93.

정기용·이성욱·민효상. (2022). 청년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책영역별 이질성과 동질성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17(2): 73-103.

정병삼·박균열. (2021). 한국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12(2): 605-620.

정준영. (2016).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월간 복지동향」, 207: 15-21.

정진철·양인준·김민희·구장회·이선우·고재성·김태환. (2022). 구직준비도에 기초한 구직단념청년

의 유형화 및 주요 특성.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4(2): 23-50.
조은설. (2018). 우리나라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산업 정책의 정책적 정합성 평가. 「한국정책연구」, 18(2): 127-152.
주희진·주효진. (2017).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들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연구: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2): 51-73.
주휘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
진형익. (2022). 대선 과정에서 청년정책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나?. 「월간 복지동향」, 280: 33-39.
채병주·황선재. (2021). 청년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이질성과 복지영역 선호. 「보건사회연구」, 41(2): 248-268.
최하예·황성수. (2018).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3): 75-99.
최홍철·김소연·나종연·최현자. (2016). 20·30 대 1 인가구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다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9(2): 89-110.
최혜민·송진미. (2022). 부동산정책 이슈선점 경쟁과 청년세대의 후보지지 –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공약과 투표결과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31(1): 203-230.

Baker, E. H. (2014). Socioeconomic status, definition.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health, illness, behavior, and society,* 2210-2214.
Quintelier, Ellen. (2007). Differenc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tween young and old people. *Contemporary Politics*, 13(2): 165-180
Wattenberg, M. P. (2015). *Is voting for young people?*. Routledge.

조 유 선: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 및 비영리조직 성과관리, 정책분석 및 평가, 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등이다(yusuncho@gmail.com).

금 유 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정책, 교육정책, 정책분석 및 평가, 불평등과 사회계층화 등이다(ys.keum@yonsei.ac.kr).

민 효 상: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분권, 복지재정, 청년정책 등이다(hsmin77@ggwf.or.kr).